

September 2026
No. 410

INSS

전략보고

동북아 동맹질서의 재편: 한미·북중·북러 사례

하경석
haks@inss.re.kr

유현정
yhj817@inss.re.kr

장세호
sohill@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한미동맹: 역할 확대와 전략적 자율성의 강화
- III. 북중동맹: 관계 복원과 전략적 재조정
- IV. 북러동맹: 동맹관계의 복원과 군사협력의 제도화
- V. 동북아 동맹질서의 구조적 재편 분석
- VI. 전략적 대응방향

동북아 동맹질서의 재편: 한미·북중·북러 사례

I. 문제 제기

II. 한미동맹: 역할 확대와 전략적 자율성의 강화

III. 북중동맹: 관계 복원과 전략적 재조정

IV. 북러동맹: 동맹관계의 복원과 군사협력의 제도화

V. 동북아 동맹질서의 구조적 재편 분석

VI. 전략적 대응방향

동북아 동맹질서의 재편: 한미·북중·북러 사례

저자 | 하경석, 유현정, 장세호

국문 초록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북중동맹의 전략적 재조정, 북러동맹의 복원과 군사협력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된 전략환경에 대응하여 각 동맹이 역할분담, 협력영역 및 공간적 범위를 재조정하는 ‘동맹 현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방위주도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핵·첨단기술 산업 및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중동맹은 기존 조약과 정치·이념적 연대를 기반으로 전략적 조율을 확대하고 있다. 북러동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세 동맹의 현대화는 상호 위협 인식과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적 적응 과정으로, 한반도·대만해협·유럽의 안보를 구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동북아 질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칭적 양극체제라기보다 상이한 조직원리와 제도화 방식을 가진 동맹과 협력 네트워크가 경쟁하는 ‘비대칭적 동맹 네트워크 질서’로 재편되고 있으며, 억제력 강화와 위기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억제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성, 중국·러시아에 대한 차별적 외교 및 역내 위기관리 역량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동맹 현대화, 동북아 동맹질서, 한미동맹, 북중동맹, 북러동맹

I 문제 제기

- 최근 동북아에서는 한미동맹 현대화, 북러 간 군사동맹 관계의 복원, 북중동맹의 현대적 재해석이 동시에 진행
 - 이러한 변화는 냉전기 동맹체제로의 단순한 회귀라기보다 각국이 새로운 위협과 전략적 수요에 맞추어 동맹의 임무, 공간적 범위, 역할 분담 및 협력 수단을 재조정하는 과정
 - 개별 동맹의 강화 여부뿐 아니라 세 동맹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면서 한반도와 대만해협,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문제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가 질문의 핵심
-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는 변화된 전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 동맹의 위협 인식, 공동 임무, 역할 분담, 군사태세, 협력 분야 및 지리적 활동 범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정의
 - 현대화는 반드시 동맹조약의 개정이나 새로운 자동가입 의무의 도입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존 조약과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기능과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변화까지 포함
 -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북중관계의 포괄화,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의 제도화는 서로 다른 형태의 동맹 현대화로 비교할 수 있음
- 동북아 역내 동맹질서 재편은 다양한 층위의 전략적 도전이 중첩된 결과
 -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대서방 장기대결, 대만해협과 한반도 위기의 연계 가능성, 미국의 선택적 개입과 동맹국 역할 확대 요구가 중첩된 결과
 - 미국은 동맹국의 방위 기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수의 전구를 관리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의 역내 군사력과 동맹체제를 견제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유인이 커짐
 - 북한도 핵능력과 대러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확대하는 중
-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중인 동맹 현대화의 비교를 위한 공통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제시:
 - ▲ 동맹 현대화를 촉진하는 위협 인식과 전략적 동인, ▲ 군사·경제·기술·체제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기능으로의 확대, ▲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과 유라시아로 확대되는 공간적 범위, ▲ 당사국 간 역할 분담과 비대칭성의 변화, ▲ 공동의 가치·이념·정치적 정당화, ▲ 조약·협의회·지휘체계 등 제도화 수준 등을 기준으로 비교 가능

- 이를 통해 세 양자관계를 모두 동일한 성격의 동맹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피하면서도, 이들이 역내 질서에 미치는 상호 연계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 동북아 질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완결된 양대 진영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움
 - 한미·미일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군사적 상호운용성 및 제도화를 기반으로 연결성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북중·북러 관계는 개별 양자조약과 정치·군사·경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전략적 연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 양측을 동일한 형태의 두 진영으로 보기보다 제도화 방식과 결속의 기제가 상이한 동맹·협력 네트워크가 경쟁하는 구조로 이해할 필요
- 본 보고서는 동북아 동맹질서의 변화를 냉전적 양극질서의 단순한 복원보다 '비대칭적 동맹 네트워크 질서'의 형성으로 파악
 - 미국 중심 동맹은 높은 제도화와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를 심화하는 반면, 북중·북러 관계는 북한을 공통의 연결점으로 하면서도 상이한 전략적 동인과 제도적 수준을 유지
 - 동시에 세 동맹의 현대화가 상호 위협 인식과 대응을 강화하고 한반도·대만해협·유럽의 안보를 연계함으로써, 역내 질서는 '억제력 강화와 위기불안정의 병존'이라는 모순적 특징을 나타냄

II 한미동맹: 역할 확대와 전략적 자율성의 강화

1. 한미동맹 현대화를 촉진하는 전략적 동인

-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미 고도로 제도화된 동맹의 임무·역할·태세를 변화된 전략환경에 맞게 재조정하는 과정
 -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사령부, 연합훈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 상설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옴
 - 따라서 한미동맹 현대화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복원하는 과정이라기보다 기존 제도 안에서 위협의 우선순위, 역할분담, 군사태세와 협력영역을 재설계하려는 성격이 강함
 - ※ 2025년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이하, JFS)와 제57차 SCM은 '동맹 현대화'를 공식 의제로 제시, 이를 종합하면 ▲ 한국 주도의 재래식 방위, ▲ 미국의 확장억제, ▲ 주한미군 태세 조정, ▲ 역내 안보사안 협력, ▲ 방산·첨단기술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 가능¹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은 동맹 현대화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안보 요인
 - 북한의 핵 투발수단 다종화와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실전경험 및 군사기술 확보 가능성은 한미 확장억제, 미사일방어, 우주·사이버 및 연합작전 능력의 동시 강화를 요구
 - 동시에 북한 위협은 미국의 핵·전략능력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지속시키면서도 한국군이 대북 재래식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역할분담 재조정의 근거로 작용
-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와 한국의 국방역량 증대가 동맹 현대화를 함께 추동
 - 2026년 미 국방전략(NDS)는 중국 억제와 동맹국의 방위책임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한국이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담당하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향을 제시²
 - ※ 반면 한미 JFS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재래식 억제태세를 함께 재확인하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 전략구상과 양국 간 합의된 방위공약을 구분할 필요
 - 한국도 군사력·방위산업의 성장에 기초하여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1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November 13, 2025); U.S. Department of War, "57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é" (November 14, 2025).

2 U.S. Department of War,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uary 2026).

- 결국, 한미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대중국 및 북수 전구 전략과 한국의 북핵 억제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라는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

2. 군사·경제·기술을 포함한 포괄적 기능 확대

- 확장억제의 제도화와 핵·재래식 통합은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 군사적 영역
 -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핵위기 협의, 정보공유, 전략적 메시지, 연습·훈련과 핵·재래식 통합(CNI)을 제도화
 - 주한미군의 전략통합요소(SIE)와 J10 조직은 한국 전략사령부와 미 전략사령부의 협력을 연결하는 조직적 기반으로 기능
 - 다만 이는 나토식 핵공유가 아니라 미국의 최종 핵사용 권한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협의·기획 및 재래식 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구조³
- 첨단기술·방위산업·군수 분야가 동맹의 새로운 기능으로 확대
 - 한미 양국은 미사일 방어,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및 유·무인 복합체계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육·해·공군 중심의 상호운용성을 다영역 작전과 첨단기술로 확장하는 과정
 - 방산·조선 분야에서는 미국 함정 MRO,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안정과 지역지속지원(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RSF) 협력을 추진
 -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국을 넘어 미국과 역내 전력의 생산·정비·보급을 지원하는 산업·군수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되는 중
-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원자력 협력이 동맹 현대화의 새로운 전략적 의제로 부상
 - 2025년 JFS는 미국법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제시
 - 다만 원자력 및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상 합의는 정치적 협력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농축·재처리 권한, 연료·설계와 건조방식의 법적·기술적 후속협약이 필요한 상황
 - ※ 특히, 미국 내 법률, 의회 절차, 핵비확산 의무와 기술보호를 둘러싼 후속 협약이 핵심 쟁점 사안

3 Xavier T. Brunson, "Statement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pril 2026).

3. 한반도 중심에서 인도-태평양으로 공간적 범위 확대

- 한미동맹의 핵심 임무는 여전히 북한 억제와 한반도 방위에 있으나 협력범위는 역내 차원으로 확대
 - 제57차 SCM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무력충돌 방지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도록 현행 전력과 태세 수준을 유지한다고 명시했으며, 헤그세스 장관도 동맹의 중심 임무가 북한 억제라고 확인
 - 동시에 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ASEAN과의 국방협력, 다자훈련, 해양안보 및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을 공동 의제로 제시하면서 동맹의 전략적 시야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⁴
- 동맹의 역내 역할 확장은 한국군의 역외 전투참여보다 미군의 지휘·기지·정보·군수 네트워크 연계를 중심으로 우선 진행
 -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인태지역의 전략적 핵심지형으로 평가하고, 주일미군 및 태평양사령부와의 작전·군수 연계를 강화
 - 특히, 한국의 산업기반을 지역지속지원 거점(Regional Sustainment Hub, RSH)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추진 중⁵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은 동맹의 역내 역할 확대에 가장 민감한 쟁점
 - 2006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한 역내 분쟁 연루를 방지한다는 원칙에 합의, 2025년 JFS는 이후의 관련 양해를 재확인
 - 그러나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과 한국 내 기지·항만·공역을 어떠한 절차로 사용할지, 한국의 협의 또는 동의가 어디까지 필요한지는 공개문서상 구체화되지 않음
 -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는 미국의 역내 대응력을 높이겠지만 한반도 방위 공백,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과 한국의 비자발적 연루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음
 - ※ 이에 전략적 유연성의 전면 수용이나 거부보다 사전협의, 기지사용, 전력복귀와 북한 동시도발 대비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⁶

4 U.S. Department of War, "57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é" (November 14, 2025); U.S. Department of War and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oint Statement for the 28th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May 13, 2026).

5 Xavier T. Brunson, "Statement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pril 2026).

6 Andrew Yeo, "How Trump and Lee can 'modernize' the US-South Korean alliance," Brookings Institution (October 24, 2025).

-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이중 위기' 가능성이 동맹의 공간적 범위를 실질적으로 연결
 - 대만 유사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경우 미국의 해·공군, 미사일방어 및 정보자산이 복수 전구에 분산될 수 있으며, 반대로 한반도 위기가 중국의 역내 군사행동과 결합될 가능성도 존재
 - 동맹의 공간적 범위 확대는 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인태지역 전체로 자동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우선하면서 정보·군수·다자훈련 등 분야별 역할을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될 것

4. 당사국 간 역할분담과 비대칭성의 변화

- 한국 주도의 대북 재래식 방위와 미국의 핵과 전략자산을 결합하는 기능적 분업이 강화
 - 2025년 한미 정상 JFS에서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확대하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와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 종합지원 계획을 제시
 - 이에 상응하여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고, 한국의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 주도에 필요한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로 함
 - ※ 역할분담의 핵심은 한국의 책임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핵·전략자산, 핵심정보 등의 분야에서 신뢰 가능한 지원을 유지하는 데 있음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변화된 역할 분담을 연합지휘체계에 반영하고 한국의 연합 방위 주도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정
 - 제57차 SCM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유지하면서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인증과 전환조건 충족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함
 -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작권 전환을 단순한 지휘권 이양이 아니라 한국군의 전시·평시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와 책임국방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
 - ※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확장억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와 한미 양국의 핵·재래식 지휘·협업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
- 주한미군 태세 조정은 한국군 능력과 미국의 전략적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 패키지로 추진해야 할 것
 - 미국 2026 국방전략은 한국의 역할 확대와 한반도 미군태세 갱신을 연결하지만, 제57차 SCM은 현행 주한미군 전력·태세 수준의 유지를 확인하고 있음
 - 이는 병력 규모보다 전력구성, 생존성, 기동성, 역내 운용과 한반도 억제력의 균형이 향후 협상의 핵심이 될 것임을 시사

- 미군 전력 감축이나 역외 이전이 성급히 추진될 경우 북한의 오판과 한국의 방기 우려를 높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
- 동맹 현대화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은 완화되지만 소멸하지 않으며 기능적 수평화와 전략적 비대칭이 병존
 - 한국은 재래식 전력과 방위산업, 재정적 기여를 바탕으로 동맹 내 역할과 협상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국을 자국 방위와 지역안보에 기여하는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
 - 그러나 미국은 핵사용 결정권, 전략자산, 글로벌 지휘·정보망과 핵심기술 통제에서 우위를 유지
 - ※ 한미동맹의 수평화는 양국의 국력이 대등해졌다는 의미보다 한국의 기여와 자율성이 확대되고 기능별 역할분담이 재조정된다는 의미

5. 공동의 가치와 정치적 정당화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및 규칙기반 질서는 한미동맹에 정당성을 부여해 온 기본 가치
 -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 및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동맹의 가치적 기반으로 제시해 왔으며, 이러한 가치공동체의 성격은 북중의 사회주의 체제연대나 북러의 반미·반서방 연대와 구별되는 요소
-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가치와 규범보다 국익추구, 부담분담, 상호주의가 동맹 담론의 전면에 부상
 - 전쟁부 콜비 차관은 동맹이 감정이나 역사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일치된 이익, 공유된 위협, 비례적인 기여와 상호이익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⁷
 - 미국의 동맹정책은 동맹국과의 상호방위 자체보다 동맹국의 실질적 군사·산업 기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중
 - ※ 한국 정부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기치 하에 동맹을 미래지향적·호혜적으로 현대화하면서 추가적인 안보 기여와 확장억제, 첨단기술, 방산·조선 및 원자력 협력의 실질적 성과와 연계하려는 입장
- 현재의 한미동맹은 가치동맹과 이익동맹의 성격이 결합된 복합동맹의 성격으로 진화하는 중
 - 공동의 가치는 장기적인 동맹 정체성을 제공하고 북한 위협, 산업협력과 상호이익은 동맹의 물질적 기반을 구성
 - 다만 안보공약이 통상압력이나 비용협상의 지렛대로 과도하게 활용될 경우 거래주의가 동맹의 신뢰와 국내적 지지를 약화시킬 가능성 상존

7 Elbridge A. Colby, “Remarks at the Sejong Institute in South Korea,” U.S. Department of War (January 26, 2026).

6. 동맹의 제도화 수준

- 한미동맹은 한미·북중·북러 가운데 조약, 정책협의, 연합지휘 및 작전 상호운용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정상회담, 외교·국방장관 협의, SCM·군사위원회회의(MCM)·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정책과 군사전략을 조정하고, 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유엔사가 연합작전, 정전관리, 미국 증원과 다국적 지원을 연결
 - 자유의 방패(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정례 연합훈련은 작전계획과 지휘절차를 반복적으로 검증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도 단계별 능력평가를 통해 추진
- 기존 연합방위제도에 핵, 첨단기술, 산업협력, 역내 안보사안 협력 기제가 추가되면서 제도화가 다층화
 - NCG와 CNI, 국방과학기술 집행위원회, 지역협력실무그룹, 조선협력 작업반, 인도태평양 산업회 복력 파트너십(PIPIR)과 지역 지속지원(RSF) 협력은 정상 차원의 합의를 군사·산업·기술 분야의 상시적 협력으로 전환하는 장치임
 - 2026년 제28차 KIDD도 전년도 정상 JFS와 제57차 SCM의 국방협력 과제를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상·장관급 합의가 실무협의체로 연결되는 수직적 제도화의 특징을 보여줌⁸
- 동맹의 높은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과 복수 전구 전력수요가 동맹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
 - 2026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축소와 쌍룡 상륙훈련 취소는 각각 북미대화와 비용을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 중동전쟁에 따른 미군 전력 제약 상황에 맞물린 사안으로 볼 수 있으나, 정례 연합훈련도 미국의 정치적·글로벌 전략 변수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줌
 - 따라서 훈련과 주요 태세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대체훈련 및 방위공백 보완절차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 과제

8 U.S. Department of War and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oint Statement for the 28th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May 13, 2026).

III 북중동맹: 관계 복원과 전략적 재조정

1. 북중동맹의 전략적 동인 변화

- 북중동맹은 탈냉전 이후 크게 약화되었으나 지난해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에 진입
 - 북중동맹은 공동의 외부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상호원조체제로서 1961년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하, 조중 우호조약)을 기반으로 출범
 - ※ ‘한미 상호방위조약(53.10.)’, ‘미대만 상호방위조약(54.12.)’, ‘미일 상호협력 및 안보보장조약’ 개정(60.1.)으로 형성된 남북안보체제로 인해 북중 양국은 ‘피포위’ 인식 공유
 - 탈냉전 이후 공동위협의 약화로 북중간 갈등과 불신이 반복되었으나, 미국의 지역동맹 지속으로 북중동맹의 전략적 필요성은 유지
 -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계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세계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북중간 전통적 우의를 견지”할 것임을 천명⁹
- 2026년 ‘조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북중동맹의 복원과 전략적 재조정이 본격화
 - 시진핑 주석은 박태성 내각 총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양국관계를 시대변화에 맞춰 발전시키고 각자의 사회주의 사업을 공고히 하며 국가 현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¹⁰
 - 또한 시 주석은 ‘조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6월 평양 방문을 통해 “새 시기 중조관계 발전의 전략적 방향과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했다”고 평가¹¹
 - 이러한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양국은 북중동맹관계를 1961년 ‘조중 우호조약’을 단순히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변화된 국제질서에 부합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미중간 전략경쟁은 단일 의제·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 다층화 국면으로 진행
 - 양국간 경쟁은 군사안보·무역통상뿐 아니라 과학기술·공급망·자유와 인권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 경쟁으로 확대

9 “中 “북중정상회담서 중요 공동인식…관계 발전 추동”, 『연합뉴스』, 2025.9.11.

10 “시진핑, 박태성 北총리 만나 “사회주의 건설·현대화 함께 추진”, 『연합뉴스』, 2026.7.10.

11 “北中정상, 조약 65주년 축전교환…“전략적 관계 발전” 한목소리”, 『연합뉴스』, 2026.7.11.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기조는 북중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
 -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경쟁의 모든 의제에서 국제질서를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도록 질서재편 시도
 - 지난해 미국의 이란 3개 핵시설에 대한 공습(소위,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2025.6)은, 북한과 중국에게 공동의 외부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하여 북중관계 회복을 추동
 - 올해 연초부터 발발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이미 핵보유를 공식화한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정치·안보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
- 북중동맹의 현대화는 복합적인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이 동맹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전략적 적응과정
 - 중국은 미국의 인태 전략과 동맹 네트워크 강화에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북러 밀착으로 인한 對 북 영향력 약화 상황을 관리할 필요
 -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대외 경제와 장기적인 체제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

2.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기능동맹 확대

- ‘포괄적 동맹화’에 기초하여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
 - 전통적인 북중동맹이 군사적 상호원조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최근 북중간 협력의제는 경제·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문화, 관광, 당 교류를 포괄¹²하며 복합 동맹으로 확대
 - ※ 이에 더해, 최근 방북한 왕후닝 전국정협 주석은 양국간 민생·기업·문화협력을 논의¹³
 - 북중동맹이 군사위기 시에만 작동하는 제한적 동맹에서 평시 국가발전과 체제 안정을 지원하는 상시적·포괄적 동맹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의미
- ‘가치동맹’ 성격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반미·반서방 연대 강화
 -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당의 영도, 서방의 압박과 체제변화 시도에 대한 반대는 양국 관계를 결속시키는 공통의 정치적 기반으로 작용

12 “김정은·시진핑, 전략협력 강화 한목소리…北비핵화 언급은 없어,” 「연합뉴스」, 2026.6.8.

13 “중서열 1~5위 총출동…조약 65주년에 전략적 관계 과시한 北中,” 「연합뉴스」, 2026.7.17.

- 지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관계의 특수성이 ‘공동의 이상과 신념’에 있다고 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은 양국관계가 각자의 사회주의 사업과 현대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¹⁴
- 핵·대미·대러관계에서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북중동맹의 가치동맹화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해소하기보다 갈등이 관계 전반의 악화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작용

3. 한반도 중심에서 역내 차원으로 범위 확대

- 미중간 지정학적 경쟁이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동북아 안보구도의 지역적 연계성 증대
 - 한반도·대만해협·남중국해가 개별적인 안보공간이라기보다 미중 전략경쟁 아래 상호 연계된 안보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
 - 미국 역시 동맹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서 역내 억지와 대응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맹체제 조정
 - 이에 따라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위기가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이중 위기(Double Crisis)’와 북한의 오판 가능성 등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부상
- 북중동맹 역시 한반도 유사시 상호원조를 넘어 역내 전략환경에 대응하는 ‘지역 범위 확대’ 경향
 - 최근 북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 및 주요 지역·국제문제에 대한 상호지지를 강조
 - ※ 김정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양 정상은 반패권·다자주의와 지역·세계 평화를 강조
 - 이는 북중동맹의 전략적 고려와 작동범위가 한반도 중심에서 동북아 및 역내 안보질서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
 - 특히 대만해협과 한반도 안보의 연계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북중동맹의 역내 전략적 중요성도 확대

4. 당사국 간 역할 분담과 비대칭성의 변화

- 북한의 대외전략은 군사력에 기초한 무력정복이나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체제 안정’과 ‘자율성 확보’에 방점
 - 북한은 양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핵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강대국간 경쟁관계를 활용

14 “김정은 “북중관계는 제1전략사업…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연합뉴스」, 2026.6.8.

- 북한의 핵 개발 및 핵 역량 고도화는 대미 억지력과 대미 협상력 제고를 1차 목적으로 하지만 부수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대에 기여
 - 골드스타인(Avery Goldstein)은, 국가들이 핵을 개발하는 의도로 △군사안보 강화와 △동맹국으로부터 정치적 자율성 보호를 제시¹⁵
 - 북한이 핵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북중동맹의 비대칭성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¹⁶
- 북한은 북러 밀착을 활용해 중·러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
 - 북러 군사·군사기술 협력 심화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한반도 정세 관리 능력을 제약
 - 러시아의 한반도 관여 확대는 중국이 중시하는 역내 안정과 전략적 영향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
- 북한은 수십 년만에 ‘가장 강력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¹⁷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중동맹의 비대칭성이 상당 수준 조정
 - 미국에게는 관리해야 할 위협요소로서, 러시아에게는 서방의 압력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군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
 -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여전히 안보상의 완충국일 뿐 아니라 중국이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레버리지로서 전략적 가치 상승
-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북중동맹의 비대칭성 완화
 - 북한이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확대함에 따라 북중동맹 내부의 힘의 분포도 변화
 - 전통적인 북중동맹은 중국이 북한에게 안보와 경제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비대칭적 후견관계였으나 현대화된 북중동맹에서는 동맹 내부의 정치적 거래관계가 과거보다 상호적으로 변화
 - 최근 양국 지도자 교류에서 ‘전략적 조율’, ‘상호지원’, ‘공동이익 수호’와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북중동맹이 일방적 보호와 의존에서 벗어나 비대칭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15 Avery Goldstein, “Deterrence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China, Britain, France and the Enduring Legacy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16 최명해, “북·중 동맹조약 체결에 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008, pp.315~338 참고.

17 Jeffrey Kruse, “2025 Worldwide Threat Assessment,” *Defense Intelligence Agency*, 2025.5.11.

5. 공동의 가치·이념·정치적 정당화

-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 수호를 북중동맹의 공동 가치 강조
 - 북중 양국은 공동의 외부위협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당의 영도, 공동의 혁명역사를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강조
 - 최근 북중 고위급 교류에서 ‘공동의 이상과 신념’, ‘사회주의 사업’, ‘국가 현대화’ 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과 정치적 정체성이 북중관계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기반으로 재부각되고 있음을 시사¹⁸
 - 최근 당 대 당 교류와 혁명사적지 방문 등은 북중관계의 역사적·이념적 연속성을 재확인하고 양국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기능 수행
- 국제질서 인식을 통해 북중 전략협력의 정치적 정당성 강화
 - 양국은 미국과 서방의 일방주의·패권주의에 반대하고 국가주권, 내정불간섭, 다자주의 등을 강조함으로써 전략적 협력의 대외적 명분을 공유
 - 특히 북한의 ‘하나의 중국’ 원칙 및 중국 핵심이익 지지와 중국의 북한 체제 및 안보이익에 대한 지지는 양국의 핵심이익을 상호 정당화하는 정치적 기반으로 작용
- 공동의 가치와 이념은 북중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관리하는 동맹의 결속기제로 기능
 - 북핵, 북러관계, 대미전략 등에서 양국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반패권주의라는 공동의 정치적 정체성은 개별 현안의 갈등이 양국관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
 - 북중동맹의 현대화 과정에서 가치와 이념은 변화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동맹의 지속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기반으로 기능

6. 조약·협약·지휘체계 등 제도화 수준

- 북중동맹은 1961년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핵심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유지
 - 조중 우호조약은 일방이 무력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이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중동맹의 법적 기반을 제공

1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同金正恩举行会谈」, 2026.6.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会见朝鲜内阁总理朴泰成」, 2026.7.10.

- 특히 2026년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양국 지도부가 조약의 역사적·전략적 의미를 재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동맹의 법적 기반을 재확인하는 움직임으로 평가
- 다만 군사적 제도화 수준은 현재까지 상설 연합지휘체계가 통합된 작전계획, 정례적 대규모 연합훈련 등 고도화된 군사통합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는 북중동맹의 현대화가 현재 단계에서는 군사적 통합보다는 정치적·전략적 협의와 다층적 교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 따라서 북중동맹은 법적 동맹의 성격은 유지하면서도 실제 운용에서는 높은 수준의 군사적 제도화보다 전략적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협력하는 유연한 동맹의 특성을 유지

IV 북러동맹: 동맹관계의 복원과 군사협력의 제도화

1. 동맹 현대화를 촉진하는 위협 인식과 전략적 동인

- 러시아의 긴급한 군수·병력 수요와 북한의 전략적 기회 공간의 활용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심각한 무기·병력 고갈 상황에 처했고, 막대한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생산·비축하고 있는 북한이 소모전 수행을 위한 가장 확실한 후방 군수 보급 기지로 부상
 - 북한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국제적 다극화는 북한에 생존·발전 공간 모색과 전략적 입지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회의 공간을 제공
- 미/서방의 압박에 대한 공동의 위협 인식과 현실주의적 상호 의존
 - 이러한 상호 결핍의 교차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북러는 '거래적' 무기 이전의 차원을 뛰어넘어 동북아와 유럽의 세력균형 재편과 다극적 국제질서 형성이라는 장기적·전략적 목표를 공유
 - 북러 「신조약」 제2조에서 명시된 '전략기술적 협동'은 양국이 미국 중심의 안보 구조에 공동으로 대항하고, 대안적 국제질서 수립을 위해 동맹을 중장기적으로 현대화하겠다는 본질적인 목적을 내포

2. 군사·경제·체제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기능 확대

- 무기 거래에서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진화하는 군사 협력
 - 북한은 제공 무기의 실전 운용에 관한 데이터의 축적과 피드백을 통해 군수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뤘고, 러시아의 대북 우주, 항공, 방공, 무인기 분야의 첨단 기술 이전 정황 탐지¹⁹
 -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장거리 자폭 무인기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FPV 자폭 드론 운용 기술과 광섬유 드론 기술을 도입하는 등 무인기 및 전자전 역량을 급격히 확대²⁰

19 이종구, “북·러 군사협력에 의한 북한 군수산업 영향과 군사능력 변화,” 「KIDA 안보전략 FOCUS」, 제12호 (2025년 3월 11일), 2025.

20 전경주, 김홍석, “러·북 협력을 통한 북한 무인기 위협의 진화,” 「KIDA 안보전략 FOCUS」, 제65호 (2025년 11월 5일), 2025.

■ 경제적 인프라 확충과 제재 회피망 구축을 통한 체제안보 강화

- 북러 자동차 전용 교량 건설은 양국 간 인프라 확충의 가장 상징적 사업이며, 2026년 9월 개통으로 군수물자와 상업 화물, 대규모 파견 노동자를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핵심 동맥으로 기능할 전망이다²¹
- 체제안보 측면에서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완벽한 외교적·법률적 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양국은 국제 금융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와 자국 통화 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동원²²

3. 북러동맹의 공간적 범위 확장

■ 북러 안보 협력 범위의 전례 없는 확장

- 과거 조소동맹과 비교해 현재 진행 중인 북러동맹 재조정의 가장 큰 특징적 변화는 안보 협력의 공간적 범위가 한반도와 극동을 넘어 유라시아와 유럽 대륙으로 전례 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
-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은 북러동맹이 한반도·극동의 국지적 방위를 뛰어넘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범지역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음을 방증

■ 유럽-아시아 안보의 융합과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

- 이는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질서가 서로 융합되고 묶이는 구조적 전이를 의미하며, 북러가 각각 유럽과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 안보 딜레마를 현실화
- 러시아는 북한을 단순히 한미일 동맹을 견제하는 완충지대로 여기기보다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진기지이자 다극화 질서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파트너로 편입

4. 당사국 간 역할 분담과 비대칭성의 변화

■ 냉전기 북한과 소련은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 관계를 지속

- 초강대국 소련이 일방적으로 체제안보와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후견국(patron), 약소국 북한은 이에 의존하며 때때로 대외정책에서 주권의 일정 부분을 제약받는 피후견국(client)의 지위 유지

21 김아람, “북러 잇는 자동차다리 9월 개통 가능성 커져…공사 진척,” 연합뉴스, 2026년 8월 25일.

22 △2024년 3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POE)의 임기 연장 결의안 거부권 행사 △북한의 유엔 제재 상한선을 초과한 정제유 밀반입 △러시아를 통한 원산지 세탁과 제3국 석탄·광물 수출 △러시아프롬스바즈뱅크가 발행한 루블화 연동 암호화폐 토큰(A7A5) 등을 통한 무기 대금 결제와 자금 세탁 활용 등. 이한술, “北, 안보리 규제 7배 넘는 정제유 밀반입…수출금지 광물도 ‘원산지 위조,’” 『아시아투데이』, 2026년 6월 7일, 허서윤, ““미국이 돈줄 막아도 다 방법이 있지”…북·러·이란으로 흘러간 코인 150조,” 『매일경제』, 2026년 7월 5일.

- 북한은 이념적으로 주체와 자주 노선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국가 안보와 경제의 최후 보루를 전적으로 소련의 우산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 노정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는 기존의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조정

- 현재의 북러동맹 구조는 러시아의 절대적인 시혜적 우위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긴급한 결핍을 채워주는 고도의 상호 교환성과 의존성이 강화된 수평적이고 거래적 성격으로 진화²³
- 북한은 대러 군사 지원을 지렛대로 고급 군사 기술과 외화를 획득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절박한 전시 안보 수요를 이용해 동맹관계를 복원한 이례적 사례

5. 공동의 가치·이념·정치적 정당화

■ 국제질서 재편기 새로운 연대의 정체성 공유

- 군사 동맹의 결속력은 단순한 물질적 이익의 교환을 넘어서 당사국들이 어떠한 규범적·이념적 토대를 공유하느냐에 따라 그 지속 가능성을 결정
- 북러는 공산주의·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과거 냉전기의 이념적 끈이 사라진 공백을 반미, 반서방, 반패권주의라는 21세기형 권위주의 연대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대체

■ 역내 세력균형과 다극적 국제질서 형성에 대한 전략적 목표 추구

- 「신조약」 서문과 제6조의 문맥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양국은 미국의 일극체제 강요와 동맹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인류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 그들은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문명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동북아·한반도 내 세력균형 유지 △다극적 국제질서의 형성에 대한 중장기적·전략적 목표를 추구

6. 조약·협의체·지휘체계 등 제도화 수준

■ 「신조약」 제4조를 통한 유사시 상호 군사 원조의 명문화

- 2024년 「신조약」 제4조는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의 법에 준하여”라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의 ‘자동 군사개입’을 현대적으로 복원²⁴

²³ 표면적인 무기 거래의 산술적 가치(무기·병력 가치 vs. 보상 추산 금액)만 놓고 보면 오히려 북한이 동맹 내에서 압도적인 핵심 자원 공급자로서의 위치를 점유했다. 박성렬, “북한, 러시아 전폭 지원했지만 돌려받은 건 10분의 1 수준…첨단 기술 이전도 제한적,” 「매일경제」, 2025년 9월 19일.

²⁴ 동 단서 문구가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양국의 권위주의적 체제 성격에 비춰볼 때 상호 군사원조는 국내법

- 더욱이 「신조약」 제3조가 직접적 위협이 조성되는 시기부터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해 위협 제거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합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군사적 개입의 문턱이 낮아진 측면도 존재

■ 정치·외교적, 행정적 소통·협력 기제의 제도화

- 양국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가 2026년 7월까지 세 차례 개최되는 등 각 부처 장관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도 장관급 회의로 개최
- 이는 북러 간의 밀착이 단기적인 전쟁 특수에 기댄 일회성 결속을 뛰어넘어 국가 통치기구의 전 부처 관료 조직을 아우르며 구조화되고 다층적인 협력 네트워크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의미

■ 군사 연합 지휘 체계 구축과 작전 상호운용성 제고

- 북러 양국이 나토나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이 고도로 통합된 상설 연합사령부를 구축하는 단계에 이르지지는 못했으나, 쿠르스크 파병 등을 통해 나타나듯 실전에서 군사적 상호운용성을 고양
- ‘2027~2031 북러 군사협력 계획’을 통해 △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첨단 무기 체계 (AI, 드론 등)의 공동 연구 개발 △중장기적 연합 군사훈련의 정례화 등 군사협력의 심화 가능성 대두²⁵

적 제약보다는 지도부의 결정에 좌우될 가능성 다대.

25 엄구호, “‘동맹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북러 관계 [4강의 시선],” 『한국일보』, 2026년 8월 22일.

V 동북아 동맹질서의 구조적 재편 분석

1. 한미·북중·북러 동맹 현대화 비교분석

- 한미·북중·북러 동맹의 현대화는 각각 상이한 위협 인식과 전략적 수요에서 출발하나, 동맹의 성격과 범위를 재구성하는 중
 - 상호방위를 넘어 경제·기술·산업·체제안보를 포괄하고 활동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며 동맹간 역할을 재조정한다는 공통점 보유
 - 그러나 세 동맹의 제도화 수준과 작동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현 동북아 질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양극체제라기보다 제도화된 미국 중심 동맹 네트워크와 북한을 매개로 선택적·기능적으로 연결되는 북중·북러 관계가 경쟁하는 비대칭적 동맹 네트워크 질서로 재편
- 세 동맹의 현대화는 동일한 국제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형태의 전략적 적응
 -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글로벌 군사력 재배치,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경쟁은 세 동맹의 변화를 동시에 촉진하는 공통의 구조적 요인
 - 한미동맹은 북한 억제와 미국의 대중국 우선전략, 한국의 방위역량 증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대화
 - 북중동맹은 미국 중심의 역내 동맹 네트워크에 대응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북한의 체제안정·전략적 자율성을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재조정
 - 북러동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무기·병력 수요와 북한의 군사기술·외화·외교적 보호 수요가 결합하면서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전쟁과 상호 결핍이 현대화를 직접 추동하는 성격이 농후
 - ※ 북러 양국은 이러한 거래를 미국 중심 질서에 대응하고 다극적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협력으로 정당화
- 세 동맹은 모두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기술·산업·체제안보로 기능을 확대하고,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며 동맹 내부의 비대칭성을 재조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양상은 상이
 - 한미동맹은 제도화된 연합방위체계에 핵·기술·산업·역내 기능을 추가하고, 북중동맹은 경제·체제협력과 지역적 전략조율을 강화하며, 북러동맹은 전쟁을 매개로 군사·기술·경제협력을 유라시아로 확대

한미, 북중, 북러 동맹 현대화의 비교

분석 기준	한미동맹	북중동맹	북러동맹
핵심 동인	북한 핵위협, 미국의 대중국 우선전략, 한국의 방위역량 증대	미국 동맹 네트워크 대응, 중국의 대북 영향력 관리, 북한의 체제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군수·병력 수요, 북한의 전략적 기회 활용
기능 확대	확장억제·CNI, 우주·사이버·AI, 방산·조선·군수·공급망	경제·인프라·과학기술·문화·관광·당 교류	무기·병력·군사기술, 교통·금융·채재 회피·체제안보
공간적 범위	한반도 → 한미일·인도태평양·지역 지속지원	한반도 → 동북아·대만해협·글로벌 질서	한반도·극동 → 유럽·유라시아
역할분담	한국의 재래식 주도성 확대, 미국의 핵·전략자산 우위 유지	북한의 핵능력과 대러 협력으로 대중 협상력 확대	북한의 군수·병력 공급으로 대러 협상력 상승
가치·정당화	자유민주주의·법치와 국익·상호주의 결합	사회주의의 체제·당의 영도·혁명역사·반패권주의	반미·반서방·주권평등·내정불간섭·다극질서
제도화 수준	높음 (주한미군, 연합지휘체계, 훈련 등 다층 협의체 구축)	중간 (양국 정상 및 당 교류 중심, 작전통합은 제한적)	빠르게 상승 (신조약을 통해 파병/전략소통 활성화, 상설 통합지휘 부재)
제약요인	위협 우선순위 차이, 부담분담, 방기·연루 위험	북핵·대러관계에 관한 이해 차이와 구조적 경제 비대칭	전쟁수요·지도자 결정 의존, 기술이전과 보상의 불확실성

- 세 동맹의 차이는 현재 동북아 동맹질서가 완결된 두 개의 대칭적 군사블록으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
 - 한미동맹은 높은 수준의 연합지휘·정보공유·상호운용성을 갖추고 미일동맹 및 한미일 협력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확대를 시도
 - 북중러 사이에는 대미 견제라는 전략적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북한 핵문제, 중국의 한반도 안정 우선정책, 러시아의 전쟁 수요와 대북 기술지원 범위 등에서는 이해관계 차이가 유지
 - ※ 동북아 동맹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동맹 네트워크와 북한을 공통의 연결점으로 중첩된 북중·북러 양자관계가 경쟁하는 구조

2. 동북아 동맹 현대화의 상호작용과 핵심 동향

- 세 동맹의 현대화는 상호 위협 인식과 대응을 강화하는 경쟁적 적응 과정
 -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북중·북러 관계 강화와 북한의 군사능력 증대가 상호 위협 인식과 대응을 촉진하면서 안보딜레마가 형성
 - 이는 어느 한쪽에서 시작된 단선적 인과관계라기보다 미중 경쟁, 북핵 고도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각 동맹의 대응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

- 한반도·대만해협·유럽에서 한 전구의 위기가 다른 전구의 자원배분과 군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연계가 심화
 - 대만유사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경우 미국의 해·공군, 미사일방어와 정보자산이 북수 전구에 분산되고, 주한미군의 역내 운용은 한반도 방위공백과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북러동맹 역시 북한의 무기·병력 제공과 러시아의 군사기술·전장경험 이전을 통해 유럽의 전쟁이 북한 군사력으로 환류되는 통로를 형성
 - 따라서 대만해협·한반도·유럽 가운데 한 지역의 위기를 다른 행위자가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 복합위기를 방지하고 대비할 필요
- 동맹 내부의 비대칭성이 재조정되고 미국 중심 네트워크와 북중·북러 관계 사이의 구조적 차이가 확대
 -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과 방산·조선·첨단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동맹 내 역할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한도 핵무기·탄약·병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중러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
 - 특히 북한은 북중·북러 양자관계의 공통 당사자로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대중 의존을 완화하고 양국의 지원을 경쟁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결절점(strategic node)으로 부상
- 동북아에서는 미국 중심 동맹 네트워크와 북중·북러 관계가 서로 다른 조직원리와 결속방식을 통해 경쟁
 - 한미·미일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조약, 주둔군, 연합훈련, 정보공유 등 공식적 제도의 연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화
 - 북중·북러 관계는 통합된 지휘체계보다는 개별 양자조약과 정상, 당·정부 간 협의, 군사·경제적 상호지원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
 - ※ 단, 한미일 협력 역시 대북·대중 위협 인식과 역내 군사역할에 대한 우선순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한일 관계의 국내정치적 변동과 각국의 대중정책 차이 등에 따라 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
- 동맹 현대화를 통해 억제력과 역내 불안정성이 동시에 증대
 - 한미 확장억제와 연합방위 강화, 북중·북러 군사협력은 각각 상대방의 계획된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
 - 그러나 핵·재래식 전력과 장거리 타격·미사일방어·군사기술 협력이 증첩될수록 상대방의 행동을 공격 준비로 오인할 위험도 증가
 - 특히 북수 전구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전력 이동과 대응 수준을 결정해야 하므로 평시의 억제력 강화가 위기 시에는 신속한 동원과 확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종합적으로, 동북아 동맹질서는 당분간 '관리된 비대칭 경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겠으나 군사·기술·산업 영역에서의 블록화와 복합위기의 가능성이 병존
 - 한미동맹과 북중·북러 관계가 각각 강화되면서도 전면전의 비용으로 인해 제한적인 외교·위기관리 채널이 유지되는 관리된 경쟁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
 - 그러나 한미일 협력이 작전·군수·첨단기술로 확대되고 북중·북러 관계도 군사·기술협력을 심화할 경우 공식적인 삼각동맹 없이도 군사·경제·기술 영역이 중첩되는 블록화가 진전될 가능성
 - ※ 한국은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와 경쟁적 동맹 강화의 악순환 관리, 동맹의 역내 역할 확대와 한반도 방위 우선순위 유지, 전략적 자율성 확대와 미국의 핵·전략능력과 안정적 연계라는 동시적 과제에 직면

VI 전략적 대응방향

1. 한미·북중·북러 동맹 현대화예의 대응

□ 한미동맹

- 한미동맹 현대화를 미국의 요구에 대한 수동적 적응이 아니라 한국의 방위주도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북한 핵·미사일 억제와 한반도 방위를 동맹의 최우선 임무로 유지하면서,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고 미국이 핵·전략자산과 정보·감시·정찰, 증원·군수 능력을 제공하는 역할분담을 구체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협의그룹과 핵·재래식 통합, 주한미군 태세 조정, 유엔사와 지역 지속지원 거점 문제를 개별 사안이 아니라 연합시위체계와 역할분담을 재설계하는 통합된 현대화 의제로 협의
 - ※ 단, 동맹 현대화가 남북 간 긴장을 불필요하게 증폭하거나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와 신뢰구축의 공간을 제약하지 않도록 관리
- 동맹의 역내 역할 확대에는 전략적 선택성과 사전협의 원칙을 적용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 내 기지·항만·군수시설의 역내 활용이 한반도 방위공백이나 한국의 의도하지 않은 분쟁 연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협의, 전력 복귀·증원 및 북한 동시도발 대응절차를 제도화
 - 한국의 국방비·방산·조선·군수 기여 확대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첨단기술 접근, 공동개발·공동생산 및 원자력·조선 협력과 연계하여 상호주의적 현대화를 추진

□ 북중동맹

- 한중 전략소통을 강화하여 북중동맹의 현대화가 북중 대 한미의 대결구도로 고착되는 것을 방지
 - 북중관계 강화와 한중관계 악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한반도 문제가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대립에 더욱 깊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상·외교·안보당국 간 전략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
 -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핵사용 방지 및 급격한 정세 악화 방지라는 이해를 활용하여 중국이 북중관계와 한중관계를 병행 발전시키도록 유도

■ 대만해협과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연계를 신중하게 관리

-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라는 원칙적 입장과 한국군의 구체적 군사관여 문제를 구분하고, 참여 수준은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법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
- 한미동맹의 역내 역할 확대 과정에서도 북한 억제력과 한반도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의 역외 운용과 주변국의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북러동맹

■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한 억제·정보·제재 역량을 강화

- 러시아의 전시 수요가 북한의 협상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대러 군사지원원을 지렛대로 첨단 군사기술과 전략적 지원을 확보하는 경로를 차단할 필요
-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등을 활용하여 무기·기술 이전과 금융·해운·에너지 분야의 제재 회피를 추적하고 국제공조를 강화

■ 북러관계의 이해관계 차이와 가변성을 활용한 대러 관여를 병행

-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 심화, 동북아 진영대결에 따른 안보부담,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따른 영향력 상실 가능성 등 러시아의 장기적 이해가 북한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
-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러관계의 변화, 북러 간 보상·기술이전 문제 등 관계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제재 분야에서의 교류와 한러 소통 채널을 유지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한러 양자관계 개선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비제재 영역에서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기대 이익을 적극 부각해 정책 방향 조정을 유도

- 러시아의 △ 신동방정책(아시아 중시 정책) △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통한 한반도 영향력 제고 △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통한 통제력 상실 △ 역내 진영 구도 고착화에 따른 안보 부담 확대 △ 경제적 대중 의존 심화에 대한 경계 등의 제 요소를 적극 활용
- △ 트럼프 2기 미중/미북관계의 변화 △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미러관계 개선 △ 러북 간 이해관계 충돌 △ 지나친 대러 경사에 대한 북한 내부의 반발 등 북러관계 구도 변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2. 동북아 동맹질서 변화에의 대응

■ 한미동맹에 기반한 억제와 '국제연대에 기반한 자강'을 병행

- 한국의 자강은 동맹을 대체하는 독자노선이 아니라 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의 독자적 방위역량과 전략적 판단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방기와 연루의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는 동맹 보완전략을 의미
- 한미동맹의 핵·재래식 억지력과 연합성을 유지하되 감시정찰, 지휘통제, 미사일방어, 정밀타격, 우주·사이버 및 군수지속 능력을 강화하여 한국이 한반도 방위와 위기관리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

- 북중·북러 동맹 강화에의 대응을 억제와 진영간 경쟁에만 의존하기보다 남북대화 복원과 군사적 긴장완화 및 호혜적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중·러와의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구조적 동인을 완화
- 한미동맹의 억제력과 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북미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으로 연결
-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주변 강대국 간 경쟁과 동맹질서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도모

■ 북중러를 단일한 진영으로 간주하지 않는 차별적 외교를 전개

- 북중·북러관계는 대미 견제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북한 핵문제, 중국의 한반도 안정 우선정책, 러시아의 전쟁 수요와 기술이전 수준에서 이해관계가 상이
- 북러 군사협력에는 제재와 억제를 강화하되, 중국에는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역내 위기 확대가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가·사안별로 대응 수단을 구분

■ 한반도·대만해협·유럽을 연계한 복합위기 대응체계를 마련

- 대만해협 위기와 북한의 동시도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군사기술의 대북 이전, 주한미군 전력의 역외 운용 등 복수 전구의 연계 가능성을 반영한 범정부 시나리오를 수립
- 각 시나리오별로 한미 지휘·협업체계, 한국군의 임무, 미국 증원전력, 기지·군수지원, 경제제재, 공급망과 국민보호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여 위기 발생 이후의 즉흥적 대응을 최소화

- 동맹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역내 위기관리와 기능적 다자대화 추진
 - 동북아 동맹간 경쟁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보다 군사적 소통, 우발충돌 방지, 핵위험 감소, 미사일 발사 통보 등 현실적인 위기관리 의제부터 협력을 추진
 - 초기에는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전제하기보다 핵전쟁 방지와 위기관리,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한 미일과 중국·러시아 간 소통을 가동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유도
- 종합적으로, 한국은 진영대결의 수동적 구성원이 아니라 동맹간 경쟁을 관리하는 전략적 행위자를 지향해야 함
 - 한미동맹을 안보의 중심축으로 유지하되, 지역 현안에 대한 참여는 위협의 직접성, 한반도 방위, 국제법, 국익을 기준으로 선택
 - 한중·한러 전략대화와 역내 위기관리, 대북 외교를 병행함으로써 동맹질서가 경직된 블록 대결과 복수 전구의 연쇄적 확전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참고문헌

1. 국문 자료

- 엄구호. 2026. 「‘동맹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북러 관계 [4강의 시선]». 『한국일보』, 8월 22일.
- 이중구. 2025. 「북·러 군사협력에 의한 북한 군수산업 영향과 군사능력 변화». 『KIDA 안보전략 FOCUS』 제12호, 3월 11일.
- 전경주·김홍석. 2025. 「러·북 협력을 통한 북한 무인기 위협의 진화». 『KIDA 안보전략 FOCUS』 제65호, 11월 5일.
- 최명해. 2008. 「북·중 동맹조약 체결에 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pp. 315-338.
- 『매일경제』. 2025. 「북한, 러시아 전폭 지원했지만 돌려받은 건 10분의 1 수준…첨단 기술 이전도 제한적», 9월 19일.
- 『매일경제』. 2026. 「“미국이 돈줄 막아도 다 방법이 있지”…북·러·이란으로 흘러간 코인 150조», 7월 5일.
- 『아시아투데이』. 2026. 「北, 안보리 규제 7배 넘는 정제유 밀반입…수출금지 광물도 ‘원산지 위조」», 6월 7일.
- 『연합뉴스』. 2025. 「中 “북중정상회담서 중요 공동인식…관계 발전 추동”», 9월 11일.
- 『연합뉴스』. 2026. 「김정은·시진핑, 전략협력 강화 한목소리…北비핵화 언급은 없어», 6월 8일.
- 『연합뉴스』. 2026. 「김정은 “북중관계는 제1전략사업…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6월 8일.
- 『연합뉴스』. 2026. 「시진핑, 박태성 北총리 만나 “사회주의 건설·현대화 함께 추진”», 7월 10일.
- 『연합뉴스』. 2026. 「北中정상, 조약 65주년 축전교환…“전략적 관계 발전” 한목소리», 7월 11일.
- 『연합뉴스』. 2026. 「中서열 1~5위 총출동…조약 65주년에 전략적 관계 과시한 北中」, 7월 17일.
- 『연합뉴스』. 2026. 「북러 잇는 자동차다리 9월 개통 가능성 커져…공사 진척」, 8월 25일.

2. 중국어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6. 「习近平同金正恩举行会谈」, 6月8日.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6. 「习近平会见朝鲜内阁总理朴泰成」, 7月10日.

3. 영문 자료

- Brunson, Xavier T. 2026. "Statement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pril.
- Colby, Elbridge A. 2026. "Remarks at the Sejong Institute in South Korea." U.S. Department of War, January 26.
- Goldstein, Avery. 2000. *Deterrence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China, Britain, France and the Enduring Legacy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Kruse, Jeffrey. 2025. "2025 Worldwide Threat Assessment." Defense Intelligence Agency, May 11.
- The White House. 2025.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November 13.
- U.S. Department of War. 2025. "57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é." November 14.
- U.S. Department of War. 2026.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uary.
- U.S. Department of War and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6. "Joint Statement for the 28th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May 13.
- Yeo, Andrew. 2025. "How Trump and Lee Can 'Modernize' the US-South Korean Alliance." Brookings Institution, October 24.

Abstract

Reshaping the Alliance Order in Northeast Asia: The ROK-US, DPRK-China, and DPRK-Russia Cases

Kyoung-Seok Ha, Hyunjeong Yoo, Seho Ja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Northeast Asia is witnessing the simultaneous modernization of the ROK-US alliance, strategic readjustment of the DPRK-China alliance, and restoration of the DPRK-Russia alliance. These developments reflect “alliance modernization,” as each alliance adjusts its roles, areas of cooperation, and geographic scope in response to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North Korea’s advanc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the war in Ukraine. The ROK-US alliance is expanding South Korea’s defense leadership and strategic autonomy while strengthening nuclear, technological, industrial, and regional cooperation. China and North Korea are reinforcing strategic coordination based on existing treaty and political ties, while Russia and North Korea are institutionalizing expanded military cooperation.

These changes constitute a process of competitive adaptation that increasingly links security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in Europe. Rather than forming a symmetrical ROK-US-Japan versus DPRK-China-Russia bipolar structure, Northeast Asia is evolving into an “asymmetric alliance network order,” marked by different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by both stronger deterrence and greater crisis instability. South Korea therefore needs to strengthen deterrence and strategic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while taking greater initiative on Korean Peninsula issues through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differentiated diplomacy toward China and Russia, and stronger regional crisis management.

Keywords: Alliance Modernization, Northeast Asian Alliance Order, ROK-US Alliance, DPRK-China Alliance; DPRK-Russia Alliance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September 2026

No. 410